

중소기업을 포함한 인턴제를 활용한 일자리 해결 방향에 대한 小考

김 종 권*

1. 국내의 인턴제를 활용한 일자리 해결 방향

경기불황으로 인해 급증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되 구조적 청년실업도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실업자 37.2만 명과 이들 중 특히 비자발적 실업자는 일자리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동시에 고학력화가 취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므로 대학 졸업 후의 사후적 실업 정책보다는 조기 진로지도, 역량개발 등의 예방정책을 통해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실직상태인 청년층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양산되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양질의 일자리, 기대 불합치 해소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취업준비생은 창업,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취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경제 활동인구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쉬었음' 인력의 대부분은 무기력한 NEET가 아니므로 이들 역시 경제활동인구로 적극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졸뿐만 아니라 고졸이하 청년실업자에 대한 긴급 일자리 및 직업능력 개발 대책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 청년실업 대책의 대부분은 고졸 이하의 취업취약 계층이 소외된 대졸 미취업자에게 초점(예, 행정 인턴 등)이 맞춰져 있다.

산업체와 학교가 일자리를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밀어붙이기식 대응보다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산업체, 노동공급자인 학교 및 취업희망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약 10만 명을 채용 중이지만 일자리 영속성, 고용가능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자리 주체인 산업체, 특히 일자리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 인턴은 목표 대비 4% 정도만 충원되는 실정으로 향후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수요 지향적 대안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 신홍대 세무회계과

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활용도 제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홍보 부족, 적용제외 규정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층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6개월 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인턴 종료 후에는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간 월 50~8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2009년 정부의 중소기업 인턴제 목표는 2만 5천 명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2009년 3월 5일 1,100명(4.4%)에서 늘어나 5월 현재 현재 9,790(39.16%)명의 청년층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전체 모집 대상인원은 3만 2천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문대졸, 고졸 실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청년인턴제는 주로 4년제 대졸사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전문대, 고졸 출신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행정 인턴 등 대다수가 4년제 대학졸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문대졸, 고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센터 및 각종 미디어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홍보를 강화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는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등 양질의 일자리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이므로 대졸을 포함한 청년인턴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대상기업의 적용제외 규정 중 고용보험 미사업장 규정을 삭제하여 참여기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적용대상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나 소비향락업체, 파견업체, 직업소개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숙박음식업종은 제외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5월 25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선책을 통하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청년인턴제 참여 기업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 유아원, 보육시설로까지 확대돼 병원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금융기관과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단체도 중소기업 인턴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인턴 참여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월급을 받으면서 외부훈련기관에서 2주 이내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직원이 인턴의 조연자로 지정돼 업무를 ‘1:1’로 지도하는 상담제가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대학 중퇴 이하의 학력자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취약 청년층에 대해선 인턴기간 중 임금의 70%(60만~96만원 범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인턴으로 참여하려면 구직신청일 이전 3개월 간 미취업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도 1개월로 완화¹⁾했고, 참가 연령 제한도 군필자는 30세 미만에서 32세 미만으로 높였다. 노동부(2009)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청년층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선책(5.25) 이전에는 지원제외규정 축소 및 참여기업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층의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다. 이는 3개월 이내의 취업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자 적용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바, 이를 철폐하여 보다 많은 청년실업자가 인턴제를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9세 이하로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실업상태의 청년이면 청년인턴에 응시할 수 있지만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으면 제외되어 활용의 걸림돌이 되었다.

의 취업 및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보다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청년층 특성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선별, 알선함으로써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이다.

3. 역량개발형 일자리제공

학교가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가능성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긴급한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는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되 동시에 학교가 직무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 실시 중인 청년인턴은 직업역량개발 효과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미취업 졸업생에게 직업능력개발과 인턴을 동시에 제공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자리+직무능력개발’의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 Co-op을 실시하여 현재의 임시적 인턴에서 산학연계를 통한 직무능력개발형 인턴으로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학생 Co-op 프로그램을 미취업 졸업생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인턴 채용이 가능한 기업들의 공통 직무수요를 파악하여 학교에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기업인턴과 특별강좌 수강을 번갈아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기업의 직무수요에 따라 전문계고, 전문대, 대학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과 정부는 인턴에 대한 급여 지급, 학교는 정부의 지원을 일부 받아 장소와 강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교의 연구중심 Co-op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Co-op 프로그램의 기본구도는 산업체의 요구를 바탕으로 학습과 현장실습을 번갈아 하는 형태이다. 학기 중에는 취업소양 교육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중심 전공교육을 강화하고, 여름학기에는 연구현장 실습을 수행한다. 3학년 때에는 8개월 간 산업체 연구인턴ships을 통해 연구개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다. 정지선(2007)은 프로그램 유경험자의 취업률이 평균 5~8% 높고, 2년간의 취업경력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1> 성균관대학교의 연구중심 Co-op 프로그램

구 분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1학년	취업소양교육 (산업체 CEO 강의)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e-러닝)	
2학년	현장중심 전공교육 (설계+e-러닝)	연구현장 실습	대학원 현장 학습 (연구프로젝트 학습)	연구현장 실습
3학년	산업체 현장 학습 (주1회 방문 근무)		산업체 연구 인턴쉽 (총 6~8개월 근무)	
4학년	대학원 현장 학습 (연구프로젝트 학습)	연구현장 실습	Capstone Design 또는 글로벌 인턴쉽	

자료 : 최재봉(2006), “지식기반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Co-op 프로그램”, 『산학협동 성공사례 세미나』, 8월 23일.

한편 미래 산업을 위한 고급인력 육성 측면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공계 졸업생을 위한 출연연구소 연수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과의 제휴를 강화하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On the research / Job Training' 개념으로서 대졸 혹은 석/박사 → 출연연구소 연수 및 인턴 → 기업연구소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4. 정부 대책의 실효성 제고: 해외인턴과 청년 인턴정책

정책 프로그램별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 취업프로그램별 고용 성과 평가를 월별로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 일자리 지원의 경우 14개의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3월 현재 해외인턴의 선발은 290명(5.7%)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층 인턴정책의 경우 경력개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하여 내실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 한편 청년층 인턴정책은 신청대상이 청년층으로 광범위하고 구직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않아 우수재원이 신청할 유인이 적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조준모(2009)는 청년층 인턴정책 수혜가 향후 구직활동에 오명효과를 주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인턴사업계획서 제도를 운영, 청년인턴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공부문 인턴제도는 2009년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정원의 2%~4%까지 인턴을 채용할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며, '09년 3월말 현재, 707개 기관에서 24,799명(금년 목표인원의 96%)을 운용하고 있다.

* 공공인턴 채용현황(09.3말 기준) : 46개 중앙행정기관 5,244명, 246개 지방(교육)자치단체 6,918명, (지방) 공기업 등 415개 공공기관 13,966명

* 관련 예산(09년) : 국고 지원금 2,300억원, 지방비 25%, 공공기관은 자체절감 예산

한편, 국무총리실은 5월 들어 '공공부문 인턴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인턴 중 30%가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 배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수 인턴 근무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계약직 지원 시 가점이 부여된다. '공공부문 인턴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행정 청년 연구 인턴을 뽑을 때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세대주,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에게 전체 채용 인원의 30%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 총리실은 또 취약계층 인턴 지원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취약계층 입증 서류를 지원자로부터 받는 대신 직접 확인하도록 조치키로 하였다. 우수 인턴에 대해서는 인턴 종료 후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지원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서류 전형 또는 면접 때 인턴활동 실적을 반영해 기관장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였다.

<표 6> 청년고용대책 예산 및 수혜자 총괄표

단위 : 만 명, 억원

고용 정책	정책 내용	대상인원	예산
1. 교육훈련(8개)	-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전직실업자 훈련 - 우선선정 직종훈련, 한국폴리텍기술기능인력양성, 미래산업분야 청년리더육성(8개 부처 공동), 대학 내 교육훈련지원, 이공계전문기술 - 연수사업, 직장체험 프로그램	32.1 (21.5)	7,119 (4,366)
2. 창업지원(1개)	- 사회서비스 벤처창업지원	0.6	375
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1개)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8개 부처 공동)	1.5	986
4. 청년인턴지원 (4개)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대학연구소 인턴, 농촌 현장지원 인턴	8.0	4,965
5. 단기 일자리 제공 (4개)	- 학습보조교사2), 대학 내 채용지원, 전과 자원총조사, 공공 DB 구축	4.4	1,794
6. 취약청년 일자리 지원(3개)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청년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취업장려수당	4.0 (3.7)	809 (754)

주 : 괄호 안은 청년대상 수혜인원 및 소요예산 추정치
 자료 : 노동부(2009). “청년고용 추가대책”.

<표 7> 청년인턴 예산 및 연간 총지원 인원 현황

2) 정부는 3월 19일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신규로 2.5만 명 채용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7월 13일 올해 추경예산으로 ‘학습보조 인턴교사’에 370억원을 투입하여 1만5천 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16일부터 전국 8709개 초·중·고교에 인턴교사 1만6,250명을 채용한다. 채용 분야는 학력향상 중점 지원학교 4793명, 전문계고 산업현장실습 지원 209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080명, 위기자녀 전문상담 1614명,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지원 1872명, 과학실험 지원 3000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1800명 등이다. 인턴교사는 강사 신분을 얻게 되며 월 120만원 정도를 받으며, 근무 기간은 2009년 2학기 4개월(방학기간 제외)이다.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지원 대상이지만 시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은 우선 선발한다.

	예산 (백만원)	지원인원 (명/월)	연인원	비중		
				예산	지원인원	연인원
청년인턴 계	1,304,855	102,271	54,312	100.0	100.0	100.0
중앙행정기관인턴	58,531	5,284	4,403	4.5	5.2	8.1
헌법기관인턴	10,377	781	651	0.8	0.8	1.2
지방행정인턴(교육인턴포함)	37,373	11,088	7,480	2.9	10.8	13.8
중앙부처자체인턴	246,406	37,602	15,364	18.9	36.8	28.3
공공기관인턴	467,723	9,266	8,102	35.8	9.1	14.9
해외인턴	351,323	6,150	2,262	26.9	6.0	4.2
중소기업인턴	133,122	32,100	16,050	10.2	31.4	29.6
직접일자리 창출(계)	5,221,431	816,634	519,324	(25.0)	(12.5)	(10.5)
일자리 정책 전체(계)	16,029,225	5,761,816	1,929,398	(8.1)	(1.8)	(2.8)

자료 : 노동부(2009.7)

<표8> 공공부문 인턴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구 분	내 용
1. 선발과정 (취약계층 선발 배 려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인턴채용을 높이기 위해 ·채용인원의 30% 취약계층 또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배정 ·선발시 취약계층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 행정기관이 자체 확인 ·인턴소득 발생으로 가계소득이 저소득층을 벗어나더라도 일정기간 의료비, 교육비 등의 혜택을 유지(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미만 ; 09년 4인 가족기준 158만원 미만), 한부모가족 세대주,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그의 가족 등)
2. 운영과정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취업역량 제고)	- 인턴으로서 경험이나 활동내용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민간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취업 캠프, 영어면접 과정, 정보화 교육 등 「맞춤 형 취업지원」 및 전 기관에 1:1 멘토제를 시행
3. 인턴 종료 후 (취업연계 강화)	- 인턴활동 결과가 실질적으로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 우수인턴에 게 공기업 등 공공기관 계약직 등의 채용시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기관장 추천서 발급을 장려하거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 인턴활동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 록 할 계획
4. 인턴 운영 성과에 대한 기관별 평가 실 시	- 각 기관별 내실있는 인턴제도운용을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09년 행정관리역량 인사부문 평가지표에 '행정 인턴 운영성과'평가 반영 (행정인턴취업률, 취업지원 관련 교육시간, 만족도, 기관장 간담회 횟수 등 운영내 실화 평가항목 마련)
5. 활용 및 운영	-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책은행에서 활용하며 자체 예산 절감을 통해 운영

자료 : 국무총리실(2009)

<표 9> 공공부문 인턴십과 중소기업 청년인턴 비교

구분	공공부문 인턴십		중소기업 청년인턴
	행정기관	공공기관	
주관부처	행안부(지자체포함)	기재부	노동부
나이 및 학력요건	18세 이상 29세 이하 대졸(예정)자	18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	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
근무기관	행정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근무기간 및 급여수준	·1년 미만 ·40시간 약100만원 ·4대 보험 제공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비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1년 미만 ·기관별 상이 ·4대 보험 제공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비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6개월 이내 ·최저급여이상(120-160만원) ·4대 보험 제공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비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수행업무	보조 업무	보조 업무	보조 업무
취업 연계성	·채용 미보장 ·우수자에게 입사 추천서 발급 ·9급으로 채용될 경우 호봉 산정시 근무기간 5할 인정	·채용 미보장 ·우수자에게 입사 추천서 발급 ·일부기관은 정규직 채용 면접시 가산점 부여	·채용 미보장 ·우수자에게 채용 기회 부여 가능 ·정규직으로 채용시 인건비의 50% 추가지원 (6개월)

자료 : 국무총리실(2009)

<표 10> 공공부문 기존 인턴제 운영의 우수사례

구분	내용
1. 인턴들의 지원이 많은 정부연구기관에서 예산절감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정원의 30% 정도 인턴 채용	인턴활동이 전공과 바로 연계되고 취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공계 석·박사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 연구원제를 추진키로 결의하고 ('08.12월) 공공기관의 계획(정원의 4%)보다 훨씬 많은 인턴을 채용 - KIST 262명(37%), 표준과학연구원 168명(38%)등 총 13개 과학기술계연구원에서 1473명 채용
2. 인턴들에게 희망에 따라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제공	- 농촌진흥청(347명) : 농식품 경영마케팅, 지역농업특성화, 국제농업 개발 등 농업분야 대졸자들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채용하여 취업희망분야 전문성을 제고 - 경북도(508명)는 “취업역량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수요에 맞추어 분야별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훈련바우처카드(년간 100만원 카드)를 지급하여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등을 제공

<p>3. 우수인턴에 대해서 인턴종료후 취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채용의 인센티브를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 : 우수인턴에 대하여 서류전형에서 5점(총 100점)의 가산점 부여 - 기초기술연구회의 “기업연계형 인턴쉽” 운영 : 녹색기술, 신성장 동력사업 등 84개 분야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 추천받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12개월 내외의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자는 추천기업으로 채용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용 - '09.3월말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13개 연구기관에서 102명의 인턴활동
--	--

자료 : 국무총리실(2009)

<표 11> 주요 공공기관 인력 조정 및 인턴 현황

단위 : 명, %

공공기관	정원	감축	신규채용 인원	대졸초입 삭감률(%)	인턴 채용
한국도로공사	4,559	507	0	-12.4	70
인천국제공항공사	933	102	44	-26.2	50
한국감정원	850	102	32	-19.6	34
대한지적공사	3,988	402	47	-20.0	194
코레일유통	578	217	16	-5.8	10
한국전력	21,734	2,420	472	-15.4	450
한국전력기술	1,910	195	4	-15.2	66
한국가스공사	2,848	305	16	-12.0	114
한국농어촌공사	5,912	844	106	-7.2	497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원(2009), 보고서

5.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중소기업중앙회(2009) 따르면, 올해 들어 청년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기업들의 실제 인턴 채용은 당초 계획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쳐, 인턴제 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 청년인턴제 실시 3개월을 맞아 청년인턴 채용업체 276개사를 대상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인턴 채용은 1.8명에 그쳐 당초 계획하였던 3명을 크게 밑돌았다고 지적하였다. 조사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0개사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은 인턴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인턴 채용이 부진한 이유로 기업들은 첫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턴생 부족(38.2%)을 주요 이유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상시근로자의 20%로 인원 제한(32.9%), 까다

로운 대상자격 요건(30.0%) 등 채용 규정상의 문제도 채용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청년인턴제 활성화를 위해 자격요건 완화(56.6%),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인턴기간 연장(51.8%), 지원절차 및 서류 간소화(48.2%)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중앙회(2009) 조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가구부품 제조업체 D사의 경우 지방 중소기업체에 대한 청년층의 근무 기피가 심각해 인턴 채용이 당초 계획했던 3명에서 1명에 그쳤으며, 추가 인턴 채용을 위하여 인턴 사원의 연령제한을 높여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단 채용한 인턴 사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업들의 54.9%는 현재 채용 중인 청년인턴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본인 희망시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응답도 15.6%에 달해 전체 조사업체의 70.5%는 정규직 채용을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2009)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근무 기피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측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규직 전환율은 계획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2> 청년인턴활용 부진사유

단위 : %

내 용	구성 비율
- 필요한 인재부족	38.2
- 상시근로자의 20%로 제한	32.9
- 까다로운 자격요건	30.0
- 신청절차 및 서류복잡	22.9
- 지원금 규모 부족	5.3
- 기타	14.1

주 : 276개 청년인턴 채용업체 대상, 복수응답

자료 : 중소기업청(2009)

6. 참 고 문 헌

- [1] 국무총리실(2009), “「사교육 없는 학교」 차질 없이 확대토록 지시”, 보도자료.
- [2] 국무총리실(2009), “공공부문 인턴, ‘취업 징검다리’역할 강화”, 보도자료.
- [3] 국무총리실(2009), “추경예산 4.9조 투입, 55만개 새 일자리 창출”, 보도자료.
- [4] 금융연구원(2009), “최근 고용상황 점검과 대응”, 주간 금융브리프(2009.7.4~7.10).
- [5] 노동부(2009). “청년고용 추가대책”.
- [6] 류지성(2009),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7] 박수진(2009), “공공부문 인턴 30%,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 한국경제신문.
- [8] 반정호, 김경희, 김경희(2005),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57, No. 3, 8월, pp73-103.

- [9] 손민중(2009), “만성실업의 탈출 : 청년취업 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
- [10] 신경립(2009), “중소기업 인턴채용 소극적”, 서울경제신문.
- [11] 이병희·안주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2002),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 실태와 정책제언”, 한국노동연구원.
- [12] 이상준·김미란(2009), “인턴제와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Issue Paper 2009-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3] 이연오(2009), “생태계 관점에서의 정책제언”, 삼성경제연구소.
- [14] 이정훈(2009), “공공기관, 월급까지 깎더니…정규직 내몰고 인턴 채웠다”, 한겨레신문.
- [15] 이정훈(2009), “‘심부름꾼’ 청년인턴…몇달 뒤엔 ‘도로 취업준비생’”, 한겨레신문.
- [16] 장기영(2009), “취업자수 4,000명 증가...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YTN.
- [17] 장용석(2009), “병원·농협 등도 청년인턴 고용 시 정부지원 받는다”, 아시아경제신문.
- [18] 전용빈(2009), “초중등 인턴교사 1만 6,250명 채용”, 국민일보.
- [19] 조준모(2009), “글로벌 경제위기하의 선진국 고용전략의 시사점: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글로벌 경제위기하의 고용정책』 (pp. 2-35), 4월 30일.
- [20] 조태근(2009), “실업률 3%? ‘유사실업률’ 13% 넘었다”, 민중의 소리.
- [21] 최재봉(2006), “지식기반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Co-op 프로그램”, 『산학협동 성공사례 세미나』, 8월 23일.
- [22] 통계청(2009), 6월 고용동향.
- [23] 한국노동연구원(2009), 청년인턴 사업.
- [24] 황보연(2009), 중장기 고용대책 없이 단기 일자리만 쏟아내, 한겨레신문.
- [25] 황예량(2009), 참여자 절반 ‘60세 이상’…실직자 흡수 ‘취지 무색’, 한겨레신문.
- [26] 황예량(2009), 희망없는 ‘희망 근로’…“시간 때워 용돈벌이” 쓴웃음, 한겨레신문.
- [27] 가디언지(2009), “Nearly a million young people not in work or education”, 6월 24일.
- [28] 르몽드(2008), “Lamorçe dune "flexiscurit" la française”, 1월 12일.
- [29] 르몽드(2008), “Le march du travail va voluer vers la flexiscurit”, 1월 12일.
- [30] Bailey T. & Hughes K., Barr. T(2000), "Achieving Scale and Quality in School-to-Work Internships: Finding from two Employers Survey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Spring vol. 22, no. 1, pp41 -64.
- [31] Bassi L.J & Ludwig J.(2000), " School-to-Work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Multi-Firm Case Study of Training, Benefits and Cost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3, No.2, Jan.
- [32] Card David, Ibarrraran Pablo, Regalia Ferdnando(2007), "The Labor Market Impacts of Youth Training in the Dominican Republic: Evidence from a Randomized Evaluation", NBER Working Paper, No.12883.
- [33] CFDT홈페이지(2008), “Accord du 11 janvier 2008 sur la modernisation du march du travail”.
- [34] Dinardo John, Fortin Nicole M, Lemieux Thomas(1996),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1973-1992: a Semiparametric Approach", Econometrica,

- Vol.64, No.5, September, pp1001-1044.
- [35] Light. A. & Ureta, M.(1995), "Early-Career Work Experience and Gender Wage Differential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3, No.1.
- [36] Light. A(2001), "In-School Work Experience and the Returns to School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9, No.1.
- [37] Luecking, R. G. & Fabian. E.(2000), "Paid Internships and Employment Success for Youth in Transition", *CDEI*, fall 23:2.
- [38] Martin Biewen(2001), "Measuring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Income Distribution: an Application to the East German Transition Proces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eb. 83(1), pp185-202.
- [39] Stock James & Watson Mark (2003),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Addison Weseley.
- [40] Svenska Dagbladet(2008), "Snabbare hjlp fr varslade", 11월 28일.